

서 평

Arthur Lewis Rosenbaum ed., *State and Society in China: The Consequences of Reform*, Boulder: Westview Press, 1992.

전 성 흥

천안문시위의 발발이 중국 민주화의 주요한 전환점으로 인식되었다면 '6.4' 무력진압은 사회주의권 변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가졌던 서구학자들에게 실망과 회의를 던져 주고 중국사회의 예외성을 인정하게 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건의 발생과 그 전개 과정에 주목하는 자들은 중국에서의 국가통제의 약화와 시민사회의 성장을 강조한 반면에 사건의 결과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강력한 국가권력의 지속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이 어떠한 간에 천안문사건은 중국연구자들에게 개혁 후 중국사회의 변화를 가장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중요한 사례로 간주되었으며, 중국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의식과 연구방향의 모색을 자극하였다.

이런 점에서 경제체제의 개혁에 따른 정치적 변화를 기존 당-국가체제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이 책은 최근의 중국연구동향을 잘 반영하는 하나의 연구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천안문사건 이후 중국의 개혁정책이 보수적 성향으로 후퇴한 시점에서 집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혁 노선의 주기적 변화라는 단기적 변화보다는 개혁정책이 제기된 1978년부터 천안문사건 직후인 1990년까지의 변화 추세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사회 변화에 대한 거시적 이해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생각된다.

이 책은 중국의 정치, 사회, 역사 등의 전공분야에서 많은 연구업적을 낳고 있는 9명의 필자들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중 국가-사회관계 변화에 대한 논쟁적 관점을 담고 있는 다음 4편의 글 즉, 종합적인 정리와 총평을 담고 있는 로젠바움(Arthur Lewis Rosenbaum)의 글을 비롯하여 관료체제의 변화와 민주화(Hong Yong Lee), 도시지역에서의 시민사회 성장(Martin K. Whyte), 도시 기업과 국가와의 관계(Dorothy J. Solinger)를 다룬 논문을 중심으로 관련주제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이흥영은 중국의 현상황에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데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관료체제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1982-87년 사이 간부의 전문화 정책추진으로 인해 혁명가적 간부에서 기술관료적 간부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의 간부들은 기술분야에서의 훈련과 경제분야에서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들로서 이런 변화는 중국이 개혁정책과 산업화를 추진하는 데 보다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고 한다. 비록 간부제도의 개혁이 관료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진

못하고 있으나 이데올로기의 기능 약화, 당 권위의 붕괴상태에서 군부쿠테타나 지방분권화로 인한 국가분열, 그리고 국내외 민주화운동에 의한 밑으로부터의 혁명 등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기술관료(bureaucratic technocrats)의 존재가 중국사회의 최후의 희망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천안문사건에서 보듯 정치적 민주화에 보다 덜 동조적인 세력인 이들 기술관료들에 의한 권위주의체제만이 시장화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고 개혁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중국이 현재 민주화의 조건을 결여하고 있고 경제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체제가 필요한데 이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개혁 이후 등장한 기술관료계층이라는 인식이다.

이홍영의 연구가 궁극적인 목표로서의 민주화를 성취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에서의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면 화이트와 솔린저의 두 논문은 보다 과정론적 관점에서 현재 중국사회의 민주화의 정도와 그 가능성을 시민사회의 등장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고 전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화이트는 중국에서 시민사회는 청말 제국시대에도 존재했는데 모택동의 전체주의적 통치가 이를 억압했다고 전제하고 개혁이 어떻게 시민사회의 재등장을 가져오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천안문사건의 실패가 다원주의적인 민주주의로 가는 역전할 수 없는 추세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퇴보인지 아니면 중국적 조건에서 민주주의가 부적절함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반문하고 현 중국사회에서 시민사회가 존재하고 점진적 형태로나마 발전하고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전자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법적, 제도적 보장이 결여된 상태에서 그것의 자율적 활동이 관계당국의 관용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익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같은 문화적 요인 등 시민사회의 형성이 제약받고 있으나 실제 중국사회내에 다양한 사적 집단과 조직이 형성,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기타 사회주의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중국의 시민사회는 폴란드나 헝가리보다는 약하나 소련과 체코에 비길만 하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보다는 강한 사회라고 평가하고 천안문사건의 발생과 그 전개과정이 이를 단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천안문사건이 실패한 것은 시민사회가 취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민에 대해 무력 행사를 불사하는 혁명1세대 지도자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중국에서 결코 민주주의가 부적절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천안문사건 이후 사회에 대한 국가통제가 강화됨으로써 시민사회의 성장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중국이 경제발전과 개혁을 추진하는 한 과거와 같은 통제사회로 회귀할 수는 없고 당-국가체제는 더이상 비정치적이고 자율적인 사회집단의 성장을 억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불리한 여건하에서도 시민사회는 생존하고 보다 민주적인 사회를 위한 잠재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화이트의 주장에 반해 솔린저는 개혁 이후 중국사회에서 비록 비국영 민간기업이 급

증하고 있으나 이것이 시민사회의 성장을 촉진하거나 도시 기업가의 권력을 제도화하지도 못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권력의 쇠퇴는 비국가부문의 등장을 허용하긴 하였으나 혼합경제하에 추진되는 경제개혁은 기업가들로 하여금 관료들의 지원에 의존적이게 하고 국가의 확일적 지배는 여전히 때문이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중국사회가 건전한 시민사회를 육성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르조아 민주주의혁명의 리더로서 역사적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주의적 자본계급의 등장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보다 국가는 국가 재정수입과 경제 건설에 필요한 상인의 자본과 기업적 기술이 요구되고, 개별 관료는 개인 수입과 친인척 취업을 위해 비지니스부문의 존재가 필요하며, 상인 역시 관료들의 정치적, 재정적 지원없이 기업을 경영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결탁을 원하며 설령 보다 자율적이기를 바라는 개혁 지향적 기업가라고 하더라도 자유경쟁은 특별한 내부채널의 상실을 의미한다는 것을 망각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료와 상인은 공생적 관계하에 상호 융합되어 있고 국가와 사회는 여전히 단일체로 존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로젠바움은 종합적 논의와 평가를 통해 중국에서의 시민사회 성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중국에서 자유화와 사회자율이 증대되고 있음은 천안문사건 이후의 상황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자유화와 개혁이 비록 그 과정에 있어서는 어려운 형태를 겪더라도 당-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시민사회를 잉태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현재 기존 이데올로기적 기능은 현저히 약화되고 있으나 다원주의 등 시민사회와 관련된 가치체계 역시 아직 충분히 수용되고 있지 않으며, 기존의 당-국가체제 역시 비록 인민들이 정부정책을 위반하는 등 공식적인 반대를 감행하는 것을 억제할 수는 있어도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회를 관리하거나 자발적 복종을 유도할 수는 없게 되었다. 결국 중국에서 시민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되었는지는 개념규정과 관점에 따라 다르다. 중국에서 국가간섭이 사실상 먹혀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여전히 시민사회의 법적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회자율은 비정치적 영역에 제한되어 있고 제도화의 수준은 미약하다. 천안문사건 이후 중국당국이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바로 시민사회의 취약성을 보여 주는 증거인 동시에 시민사회가 국가지배체제에 대한 하나의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혁 이후 중국사회에서 다양한 조직과 집단이 형성되고 사회의 자율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논쟁적이라고 하겠다. 화이트와 솔린저의 상반된 견해는 로젠바움이 지적한 대로 국가의 통제와 사회의 자율성에 대한 개념규정과, 그리고 다른 한 측면에서 중국사회가 반영하는 변화(자율)와 지속(통제)이라는 이중적 성격에 대한 상대적 강조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화이트가 주장하는 중국에서의 시민사회는 그 자율적 활동이 국가의 관용에 크게 의존한다고 전제하고 있는 바 어떤 의미에서의 시민사회를 말하는지, 그리고 솔린저가 주장하는 상인과 간부간의 공생적 관계는 독립적인 기업가로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중국사회의 영속적 특징인지는 불분명하다. 어떤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이 확보될 때 시민사회의 성장이라는 변화를 말할 수 있는지 그 평가기준에 대해 연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국가-사회 관계라는 분석틀이 중국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증진하는 데 유용한 것이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간의 분리는 서구에서보다는 덜 명확하고 관료의 역할은 더욱 클 것”이라는 로젠바움의 언급이 시사하고 있듯이 과연 중국에서의 시민사회 성장이라는 문제는 서구사회와의 양적인 비교에서 파악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인지, 아니면 서구 자본주의 발전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시민사회의 개념이 사회주의사회의 시장화개혁 과정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논의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성홍, 서강대학교 강사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1

Tel : 705-8387(O), 934-9210(H)